

의안번호	제 2020 - 17호
의 결 연 월 일	2020. 5. 18. (제102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 1. 개요
- 2. 추진 경과

II.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1. 개요
- 2. 추진 경과

III.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 1. 개요
- 2. 관련 규정
- 3. 공개 방법
- 4. 추진 일정

IV.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 1. 개요
- 2. 관련 규정
- 3. 의견수렴 계획
- 4. 시행 일정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1. 고용노동부의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검토
 - 나.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위반 처벌 현황
 - 다. 중대재해 처벌 관련 여론 동향
 -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가. 개요
-

나. 회신 완료 접수의견

다.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

3.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나. 민원 우편

I.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양형기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양형위원회 제101차 회의에서 의결된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관보 게재를 통하여 공개하였음

2. 추진 경과

- 2020. 4. 20. 양형위원회 제101차 회의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2020. 5. 4. :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 의뢰 공문 시행
- 2020. 5. 11. : 양형기준 관보 게재

(<http://gwanbo.mois.go.kr>)

II.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양형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양형기준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양형기준 개선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최종 의결된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관보에 게재하고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 추진 경과

- 2020. 5. 13. : 홈페이지 게재 의뢰(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시행일	범죄군	게재 경과
2020. 7. 1.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2020. 5.말 게재 예정

III.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ㄴ 관보게재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20. 5. 18. 양형위원회 제102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20. 5. 하순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20. 6. 중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IV.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 절차를 객관화·투명화 하는 동시에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3. 의견수렴 계획

가. 대상 기준안

- 제102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양형기준안(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 기준안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7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보 건 복 지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9		행 정 안 전 부	법무담당관
10		여 성 가 족 부	법무감사담당관
11		국 방 부	법무관리관
12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13	연 구 기 관	대 한 범 죄 학 회	사무국장
14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5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6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7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8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9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20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연번	구분	기관	비고
21		한 국 피 해 자 학 회	총무간사
22		한 국 형 사 소 송 법 학 회	총무간사
23		한 국 형 사 판 례 연 구 회	총무간사
24		한 국 여 성 학 회	총무간사
25		한 국 젠 더 법 학 회	총무위원장
26	유 관 기 관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사무총장
27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사무총장
28		한 국 범 죄 방 지 재 단	사무총장
29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1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33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사무총장
34		한 국 여 성 인 권 진 흥 원	여성폭력방지본부 성폭력방지팀장
35	시 민 단 체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사무국장
36		중 앙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정책연구팀장
37		중 앙 아 동 보 호 전 문 기 관	정책연구팀장
38		참 여 연 대	사법감시센터, 청년참여연대
39		한 국 가 정 법 률 상 담 소	총무부장
40		한 국 Y M C A 전 국 연맹	사무총장
41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42	시 민 단 체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사무총장
43		한 국 성 폭 력 상 담 소	소장
44		한 국 여 성 의 전 화	사무처장
45		한 국 여 성 민 우 회	사무처장
46		전 국 성 폭 력 상 담 소 협 의 회	사무처장
47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사무총장
48		다 시 함 께 상 담 센 터	소장
49		탁 틴 내 일	사무국장
50		한 국 사 이 버 성 폭 력 대 응 센 터	소장
51		십 대 여 성 인 권 센 터	사무국장
5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무국장

4. 시행 일정

○ 의견조회 기간 : 2020. 5. 25. ~ 6. 25.

○ 의견조회 취합 : 2020. 6. 26.

※ 의견수렴 결과는 의견수렴 후 해당 안건의 양형위원회 회의 시 보고 예정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고용노동부의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아래 의견은 2020. 5. 4. 및 2020. 5. 8. 양형위원회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검토(2020. 5. 4. 접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검토

<‘20.3.24.(화), 산재 예방정책과>

1.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자는 감소 추세*이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

* (‘16년) 969명 → (‘17년) 964명 → (‘18년) 971명 → (‘19년) 855명

** (‘14년 기준) △ 우리나라 0.58 △OECD 평균 0.3 △일본 0.19 △독일 0.16

- 이에 ‘18년부터 산업재해를 비롯하여 자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감축을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이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20.1.16 시행)

- 사망사고가 빈번한 수급인(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
- 그러나 그간 법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은 낮은 수준의 벌금형* 선고에 그쳐 법정형 상향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한계 우려

* (‘17년) △법인: 벌금형 89.1% △자연인: 벌금형 71.7%, 집행유예 23.1%, 자유형 2.4%

- 이에 따라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

* "전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바라는 욕구만큼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현실화될 필요 있음"(18.12월, 개정 산안법 상임위 의결, 한정애 의원)

"산재 예방을 위해 양형기준 강화를 통한 적정 형량 적용이 중요...개정 산안법 법정형 상향의 실효성 확보 위해 사법부의 엄격한 처벌규정 적용 필요"(19.10월 국정감사, 설훈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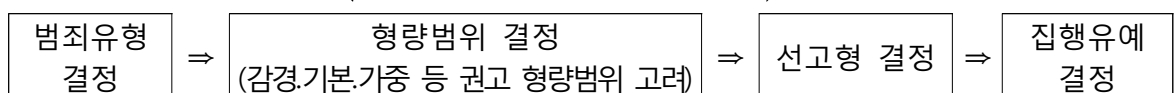
【참고: 양형기준】

① 양형기준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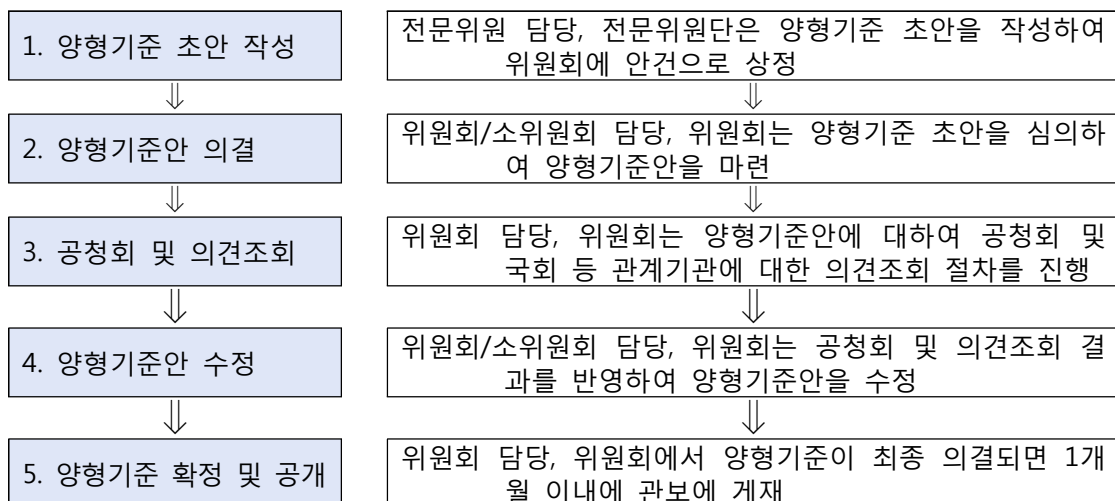
- **(의의)** 사건에 따른 **형량 차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법정형 중에서 법관의 선고형 및 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 시 참고 기준
- **(근거)**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 도출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법원조직법 제81조의6)
- **(구속력)**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 이탈 시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므로(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음 (양형기준 준수율: 89.7%<'12~'16>)

②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은 개별 범죄 특성을 반영한 **범죄군*별로 분류함**(41개)
 - * 살인범죄군,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과실치사상범죄군 등
- 범죄군은 행위태양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고, 각 유형별 감경, 기본, 가중영역으로 구성된 **형량범위****가 부여됨
 - * 예) 과실치사상범죄군 범죄유형: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예) 산안법위반 유형 형량범위: 감경(4월-10월), 기본(6월-1년6월), 가중(10월-3년6월)
- 법관은 ①**범죄유형을 결정한 후** ②**법정형**(각 범죄에 대한 법률상 형벌) 중 **형량범위를 결정**하고 ③**선고형의 종류**(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한 다음 ④**일정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③ 양형기준 설정 절차



④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및 문제점

○ (현행 처벌규정) 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 강화

- (사업주)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 5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 수강명령 병과 규정 신설
- (도급인) ①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 (종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②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 (종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 + 수강명령 병과

○ (양형기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독립된 범죄군이 아닌 과실치사상 범죄군에 속한 일부 유형으로 분류되고,

- 그 유형의 구성요건을 산업안전보건법 미이행 치사죄에 대하여만 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다른 범죄는 양형기준을 두지 않았고,
- 사업주에게 특별한 가중·감경 사유가 없을 때 징역 6월부터 1년 6월 내 범위에서 형량을 정하도록 권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정의>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가중
제4유형 산업안 전보건 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제39 조제1항, 또는 제63조 를 위반하여 근로자 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舊 제66조 의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과실치사상 범죄군 유형별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과실치사	-8월	6월 - 1년	8월 - 2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6월	4월 - 10월	8월 - 2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 - 10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6월

○ (문제점) ①故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범죄 발생빈도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에 독립된 범죄군으로 편성되지 않았고,

- 안전보건조치미이행죄 및 작업중지조치미이행죄(산안법 제168조) 등 다양한 중요 범죄유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 유형만 양형기준에 규정*

* 반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독립된 범죄군으로 편성되었고, 강제근로, 중간착취, 임금 등 미지급의 유형과 세부적인 구성요건으로 양형기준이 규정되어 다양한 중요 범죄유형을 규율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중 강제근로 등 유형의 구성요건>

가. 강제근로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가중
사용자가 폭행, 협박 등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 협박 등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공급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폭행, 협박 등으로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	선원법 제167조 제3호, 제25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법정형 대비 양형기준이 낮으며,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법정형이 높음에도 양형기준은 낮아 법 균형성 문제

* (업무상과실치사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위반치사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③ 선고형의 다수가 벌금형임에도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 낮은 수준의 벌금형 선고 → 기업의 산재예방 인식 변화 한계

* 다만, 다른 범죄군의 경우에도 벌금형은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2.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집행 사례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양형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외국 입법례 확인 한계
-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처벌실태는 높은 수준의 벌금형을 부과하여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중요성을 강조
 - 특히 영국의 경우 벌금형에 대해서 양형지침을 마련하여 대국민 공개

1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실태

- (현황) 영국은 산업안전보건법(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치의무 위반행위(제33조)와 벌칙을 규정(별표 3A)
 - 우리나라 법 대비 자유형(징역형, 금고형)은 다소 낮은 수준(2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의 경우 상한이 없는 것이 특징
 - 아울러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제정하여
 - 기업 활동이 관리·조직되는 방식 및 배려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기업에게 책임 부과*
- * 근로자의 산재 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바, 사망사고의 경우 기업이 중대한 의무 위반을 한 경우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적용
- (양형기준) 근로자의 산재 상해·사망사고에 관하여 ①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처벌대상: 개인 및 기업)과 ②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위반사건(처벌대상: 기업)으로 구분하여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개인 또는 기업의 위반에 대한 '과실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유형을 판단

<피해의 정도>

피해의 정도			
	Level A	Level B	Leve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 해결을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장애 · 수명의 상당한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vel A보다는 덜한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일상생활 또는 직장복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영구 또는 회복불가능 상태 	Level A 또는 B에 속하지 않는 기타 상태
위험성 매우 높음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위험성 중간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위험성 낮음	유형 3	유형 4	유형 4(최저)

- (개인) 유형에 따라 자유형 또는 벌금형의 형량 기준을 정하였고, 위반의 경중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최소 40시간, 최대 300시간) 또는 통행금지 명령(최소 16시간, 최대 12개월)을 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개인)>

피해정도/피해유형		기준	감경/가중
매우높음	유형1	자유형 1년6월	자유형 1-2년
	유형2	자유형 1년	자유형 26주 - 1년 6월
	유형3	자유형 26주	벌금 유형 F 또는 최고 사회봉사 명령 - 자유형 1년
	유형4	벌금 유형 F	벌금 유형 E - 자유형 26주
높음	유형1	자유형 1년	자유형 26주 - 1년 6월
	유형2	자유형 26주	벌금 유형 F 또는 최고 사회봉사 명령 - 자유형 1년
	유형3	벌금 유형 F	벌금 유형 E - 자유형 26주
	유형4	벌금 유형 E	벌금 유형 D - E
중간	유형1	자유형 26주	벌금 유형 F 또는 최고수준 사회봉사 명령 - 자유형 1년
	유형2	벌금 유형 F	벌금 유형 E 또는 중간수준 사회봉사 명령 - 자유형 26주
	유형3	벌금 유형 E	벌금 유형 D 또는 최저수준 사회봉사 명령 - 벌금 유형 E
	유형4	벌금 유형 D	벌금 유형 C - D
낮음	유형1	벌금 유형 F	벌금 유형 E 또는 중간수준 사회봉사 명령 - 자유형 26주
	유형2	벌금 유형 D	벌금 유형 C - D
	유형3	벌금 유형 C	벌금 유형 B - C
	유형4	벌금 유형 A	조건부 처벌 - 벌금 유형 A

<개인 양형기준의 벌금 유형>

유형	기준	감경/가중
벌금 유형 A	주간소득(weekly income)의 50%	주간소득의 25- 75%
벌금 유형 B	주간소득(weekly income)의 100%	주간소득의 75- 125%
벌금 유형 C	주간소득(weekly income)의 150%	주간소득의 125- 175%
벌금 유형 D	주간소득(weekly income)의 250%	주간소득의 200- 300%
벌금 유형 E	주간소득(weekly income)의 400%	주간소득의 300- 500%
벌금 유형 F	주간소득(weekly income)의 600%	주간소득의 500- 700%

- (기업) 부과하는 벌금형의 액수는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기업의 연매출액에 따라 대기업(연 매출 5천만 파운드 이상), 중견기업(1천만-5천만 파운드), 중소기업(2백만-1천만 파운드), 초소형기업(2백만 파운드 이하)로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기업)>

(단위: 파운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초소형기업	
		기준	감경/가중	기준	감경/가중	기준	감경/가중	기준	감경/가중
매우 높음	유형1	4백만	260만-천만	160만	백만-4백만	45만	30만-160만	25만	15만-45만
	유형2	2백만	100만-525만	80만	40만-2백만	20만	10만-80만	10만	5만-20만
	유형3	1백만	50만-270만	40만	18만-백만	10만	5만-40만	5만	2만5천-10만
	유형4	50만	24만-130만	19만	9만-50만	5만	2만-19만	2만4천	만2천-5만
높음	유형1	240만	150만-6백만	95만	60만-250만	25만	17만-백만	16만	10만-2만5천
	유형2	110만	55만-290만	45만	22만-120만	10만	5만-45만	5만4천	3만-11만
	유형3	54만	25만-145만	21만	10만-55만	5만4천	2만5천-21만	3만	만2천-5만4천
	유형4	24만	12만-70만	10만	5만-25만	2만4천	만2천-10만	만2천	5천-2만천
중간	유형1	130만	80만-325만	54만	30만-130만	16만	10만-60만	10만	6만-16만
	유형2	60만	30만-150만	24만	10만-60만	5만4천	2만5천-23만	3만	만4천-7만
	유형3	30만	13만-75만	10만	5만-30만	2만4천	만2천-10만	만4천	6천-2만5천
	유형4	13만	5만-35만	5만	2만-13만	만2천	4천-5만	6천	2천-만2천
낮음	유형1	30만	18만-70만	13만	75만-30만	4만5천	2만5천-130만	3만	만8천-6만
	유형2	10만	3만5천-2만5천	4만	14만-10만	9천	3천-4만	5천	천-2만
	유형3	3만5천	만-14만	만4천	3천-6만	3천	7백-만4천	천200	2백-7천
	유형4	1만	3천-6만	3천	일천-일만	7백	백-5천	2백	50-2천

-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예측 가능성, 위반의 종류 및 경중에 따라 위반 유형 A(피해의 정도 또는 과실이 매우 높음)와 유형 B를 구분하여 양형기준을 정함

<기업과실치사 및 살인 양형기준>

(단위: 파운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초소형기업	
	기준	감경/가중	기준	감경/가중	기준	감경/가중	기준	감경/가중
유형 A	750만	480만-2천만	3백만	180만-750만	80만	54만-280만	45만	27만-80만
유형 B	5백만	3백만-1250만	2백만	120만-5백만	54만	35만-2백만	30만	18만-54만

□ **(운영)** '17-'18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당 평균 벌금액은 14만 7천 파운드(한화 약 2억, 유죄판결 선고 493건/벌금 총액 7억2천6백만 파운드)

- 특히 '16년에 변경된 양형지침에서 '벌금액은 반드시 경영진 등이 산업안전 관련 법률 준수 필요성을 가지도록 회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징벌적이고 충분해야 한다'고 정함에 따라 벌금액 급증

* ('14-'15) 평균 29,197 £ → ('15-'16) 57,735 £ → ('16-'17) 125,902 £ → ('17-'18) 147,292 £

□ **(산안법 위반 사례)** ①과거 유사한 사고(2건)가 있었음에도 자체 안전 점검 미 실시 및 안전사고방지조치 미흡에 따른 크레인 점검 중 사망사고에 대해 벌금 140만 파운드(한화 약 21.5억, '18년 기준) 선고

②무자격 하청업체가 야기한 사망사고에 대해 하청업체는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30만 파운드(한화 약 5억, '15년 기준), 하청업체 대표는 과실치사 및 산안법 위반으로 징역 20개월 선고,

산안법 위반으로 원청업체는 벌금 7만5천 파운드(한화 약 1.3억, '15년 기준), 원청업체 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 선고

③ 공사현장에서 차량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사망사고에 대해 18만 파운드(한화 약 2.6억, '19년 기준) 선고

- **(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 위반 사례)** ①안전조치 지침 위반, 안전 감시자 미배치, 사고 후 적정조치 미흡 등 사업장의 안전시스템 위협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벌금 38.5만 파운드(한화 약 6.7억, '11년 기준) 선고

② 지게차 조작에 의한 물체 추락에 따른 사망사고에 대해 벌금 19만 파운드(한화 약 35억, '12년 기준) 선고

- (현황)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70)과 미국연방규칙 제29장(29 CFR)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의 기본 내용 규율, 실제 집행은 대부분 각 주에 위임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처벌규정은 위반의 종류에 따라 민사벌칙과 형사벌칙으로 구분되며, 벌금을 법 집행을 위한 주요 방법으로 인식하며 법 위반 시 상당한 액수의 벌금 부과가 특징

구분	주요 위반사항		처벌
민사	고의 또는 반복적 위반	사업주가 자신의 행위가 위반임을 알고 있거나, 사업장에 위험요소가 존재함을 인지함에도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7만달러 이하의 벌금, 단, 고의로 위반 시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5천달러 이상 부과
	중대한 또는 경미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 사망 혹은 심각한 신체적 장애 야기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 위험성을 사업주가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경미) 안전보건과 직접적 관련 있으나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 장애 일으킬 우려 없는 경우 	7천달러 이하의 벌금
형사	고의적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1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병과 가능) 단, 사전에 1회 이상 동일한 사항에 대해 유죄판결 받은 경우 2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

- (주요사례) ①가연성 분진 관리 미흡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고(사망 5명, 중경상 14명)에 대해 벌금 **184만 달러**(한화 약 20억, '17년 기준) 선고
- ② 안전방지 시스템 미비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고(근로자 끼임, 절단사고)에 대해 벌금 **총 51만 달러**(한화 약 5.7억, '17년 기준) 선고

⇒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해 자유형(징역형, 금고형)을 부과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나 높은 수준의 벌금형을 부과하여 기업의 인식 변화 유도 등 법 규범력을 확보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조사

- ❖ 최근 일반국민 및 노사단체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조사」(1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결과 법 위반처벌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양형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음

1

조사 개요

-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규정, 양형기준 등 전반적인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산재예방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상·방법) 전국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비례할당 표본 추출을 통한 일반국민 1,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19.8월)
 -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이해관계 대립 집단 간 인식 차이 비교를 위해 전국 지역별 노사단체 임원 100명 대상 설문 조사(19.8월)
- (조사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적정성, 양형기준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관련 양형기준의 적정성 등 조사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추출방법
일반 국민	전국 17개 광역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95% 신뢰수준 ± 3.1 %p)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비례할당 표본추출
이해 집단	경영자단체(전국 지역별 경영자단체 임원; 경총, 전경련, 상의, 중기협 등) 100명	방문 설문조사 (필요시 FG 병행)	임의표본추출
	노동자단체(전국 지역별 노동단체 임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100명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의 엄격성·일관성 및 처벌규정의 적정성 평가

- **(처벌의 엄격성·일관성)** 일반국민과 노동자단체 뿐만 아니라 경영자단체에서도 법 위반 시 처벌의 엄격성·일관성에 대해 **부정적** 평가 높음

* (처벌 엄격성-부정) △일반국민 79.9% △노동자단체 82.1% △경영자단체 57.6%
(처벌 일관성-부정) △일반국민 79.1% △노동자단체 79.5% △경영자단체 61.0%

- **(처벌규정 적정성*)** 이해집단 간 차이 있으나, 처벌규정이 부적정하다는 의견 중에서 **양형기준 상향 필요** 의견이 하향 필요 의견보다 높음**

* (질문지) "산안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국민) 처벌규정 부적정: 50%(양형기준 상향 필요 33.2%, 하향 필요 2.4%)
(노동자단체) 처벌규정 부적정: 64%(양형기준 상향 필요 56.9%, 하향 필요 3.1%)
(경영자단체) 처벌규정 부적정: 34%(양형기준 상향 필요 30.0%, 하향 필요 16.0%)

□ 양형기준제도 전반에 대한 인지도

- **(양형기준제도 인지)**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비율은 적으나 **대략적 인지도는 높은 수준**

* (잘 알고 있음) △일반국민 2.6% △노동자단체 0.9% △경영자단체 3.0%
(대강 알고 있음) △일반국민 24.9% △노동자단체 28.6% △경영자단체 26.0%
(들어본 적 있음) △일반국민 43.2% △노동자단체 37.5% △경영자단체 42.0%

- **(양형기준 신뢰성·효과성)** 양형기준에 대한 신뢰성은 높지 않은 편이나, 형량의 일관성 및 범죄에 부합한 형량 부여와 범죄자의 경제능력 등에 따른 영향 감소 등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 (신뢰성) △일반국민 32.1% △노동자단체 15.2% △경영자단체 24.2%

** (효과성) ①형량 일관성: △일반국민 79.9% △노동자단체 82.9% △경영자단체 80.0%
②범죄에 부합한 형량 부여: △일반국민 66.8% △노동자단체 68.5% △경영자단체 66.0%
③범죄자 지위 등에 따른 영향 감소: △일반국민 75.0% △노동자단체 71.2% △경영자단체 66.0%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양형기준의 인식

- **(양형기준 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선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비율은 적으나 대략적 인지도는 높은 수준

* (잘 알고 있음) △일반국민 5.5% △노동자단체 1.8% △경영자단체 3.0%
(대강 알고 있음) △일반국민 35.7% △노동자단체 30.1% △경영자단체 30.0%
(들어본 적 있음) △일반국민 41.7% △노동자단체 33.6% △경영자단체 36.0%

- **(양형기준 적정성*)** 이해집단 간 차이 있으나, 양형기준이 부적정하다는 의견 중에서 양형기준 상향 필요 의견이 하향 필요 의견보다 높음**

* (질문지)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특별한 가중·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 ‘징역 6월부터 1년6월까지의 범위’ 내의 형량을 권고, 이러한 양형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 반 국 민) 부적정: 58.9%(양형기준 상향 필요 34.0%, 하향 필요 3.2%)
(노동자단체) 부적정: 70.3%(양형기준 상향 필요 35.2%, 하향 필요 1.5%)
(경영자단체) 부적정: 40.0%(양형기준 상향 필요 20.2%, 하향 필요 8.1%)

- 특히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벌금 7백만 원의 형을 선고한 가상의 사례*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부적정하다는 의견 등이 높게 나옴

* (사례) A(W개발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작업현장에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을 미설치하였으며, B(W개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미흡 → B가 작업 중 추락에 의한 사망

** (일 반 국 민) 부적정: 75.7%(양형기준 상향 필요 33.4%, 하향 필요 3.3%)
(노동자단체) 부적정: 74.5%(양형기준 상향 필요 34.9%, 하향 필요 1.4%)
(경영자단체) 부적정: 43.4%(양형기준 상향 필요 23.1%, 하향 필요 5.8%)

- **(양형 및 집행유예인자 인식<참고>)** 양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가중·감경 양형인자와 집행유예인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집행유예인자 중 긍정적 참작사유*는 부정의견 다수 있음

*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4. 양형기준 조정 방향성

□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재고와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합리적 조정 필요

I) 그간 범죄 발생 빈도가 높거나 사회적 중요성 높은 범죄에 대해 독립된 범죄군을 설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산안법 위반사건을 독립된 범죄군으로 분류 및 안전보건미이행치사죄 외의 범죄에 대한 세부 유형 설정

ii) 세부 유형별 권고형량 범위를 기업 등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

* 예) 양형위는 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 등 범행의 흉포성과 위험성이 크나, 기존의 양형기준이 법정형과 비교하여 낮다고 판단하여 상향조정

→ (강도강간죄) △감경: 5-8년→5-9년 △기본: 7-10년→8-12년 △가중: 9-13년→10-15년
(특수강도·추행) △감경: 5-7년→5-8년 △기본: 6-9년→7-11년 △가중: 7-11년→9-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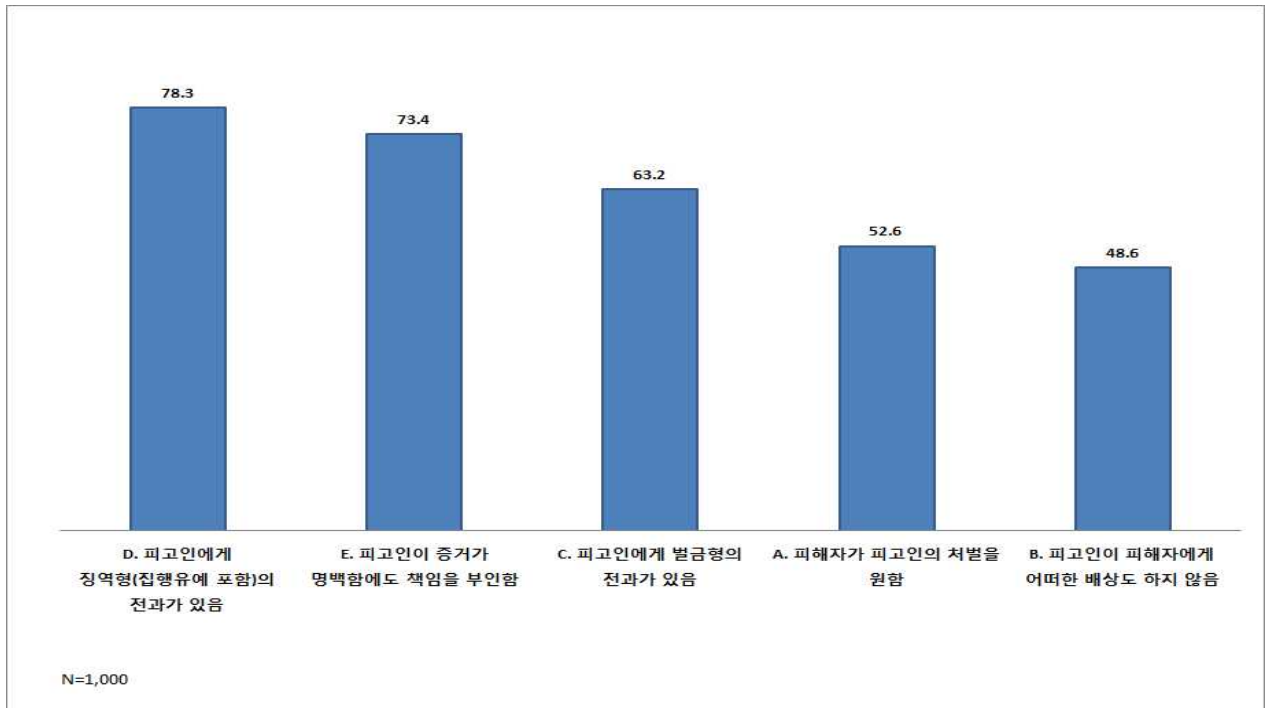
iii) 벌금형의 경우도 양형기준* 설정을 통해 범죄에 부합하는 형을 부여하여 기업이 산업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적 관점으로 인식하도록 유도

* 단, 우리나라 법체계 상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 사례가 없으므로 체계적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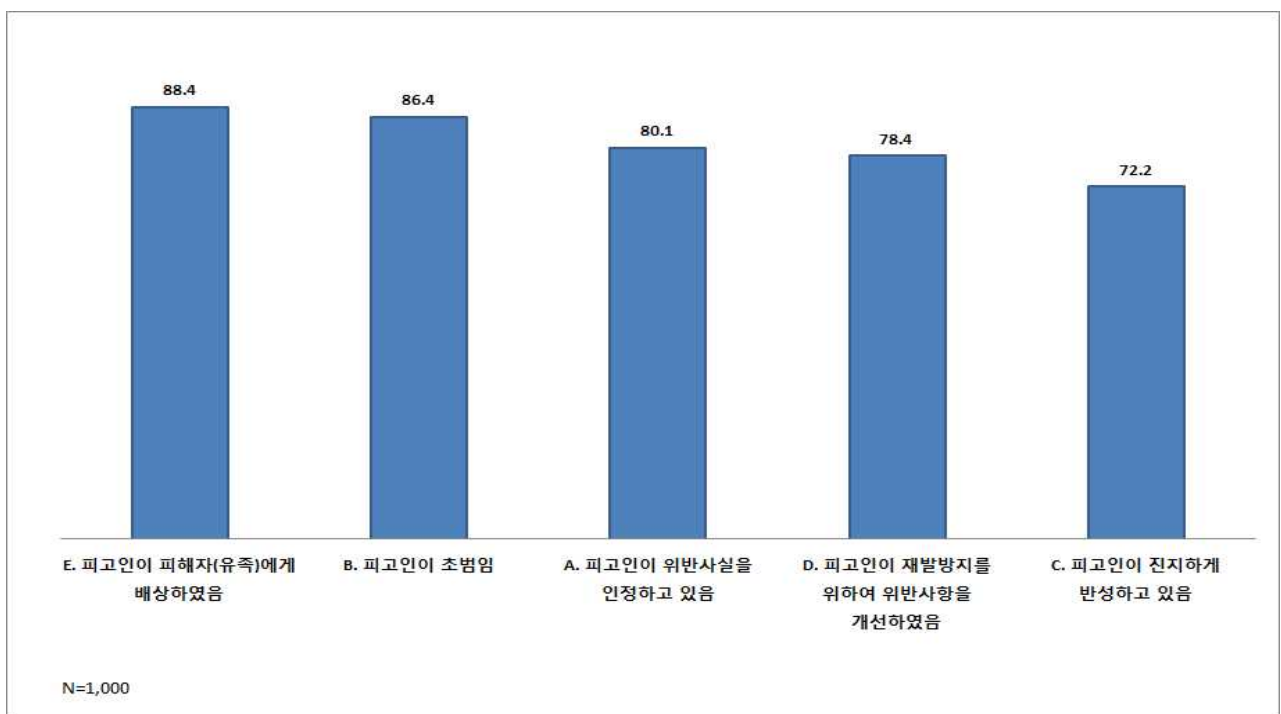
□ (향후계획) 산안법 위반사건 양형기준 강화 관련 전문가협의회 개최 예정('20.상반기)

* 발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이진국 교수, 아주대)

□ 산업안전보건법 가중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 산업안전보건법 감경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참고 2

집행유예 인자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

N=1,000명, 단위: %

구 분	매우 부정	약간 부정	상관 없음	약간 긍정	매우 긍정	부정	긍정	상관 없음
1)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9.6	31.8	18.1	7.6	2.9	71.4	10.5	18.1
2)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27.6	38.9	20.3	11.0	2.2	66.5	13.2	20.3
3)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47.6	28.0	13.7	7.3	3.4	75.6	10.7	13.7
4)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17.4	22.3	22.5	32.4	5.4	39.7	37.8	22.5
5)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8.8	18.8	24.9	42.2	5.3	27.6	47.5	24.9
6)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5.0	12.6	31.1	37.5	13.8	17.6	51.3	31.1
7) 형사처벌 전력 없음	6.9	13.5	46.5	28.1	5.0	20.4	33.1	46.5
8)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5.6	13.2	30.8	40.8	9.6	18.8	50.4	30.8
9)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5.8	35.8	17.7	7.7	3.0	71.6	10.7	17.7
10)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8.1	17.2	36.8	31.1	6.8	25.3	37.9	36.8
11)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8.7	27.4	12.6	7.5	3.8	76.1	11.3	12.6
12)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64.7	14.2	9.9	6.6	4.6	78.9	11.2	9.9
13)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27.4	31.0	32.4	6.9	2.3	58.4	9.2	32.4
14)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50.5	20.7	16.6	8.0	4.2	71.2	12.2	16.6
15) 피해 회복 노력 없음	58.5	20.4	10.6	6.5	4.0	78.9	10.5	10.6
16) 진지한 반성 없음	61.9	17.8	9.9	6.4	4.0	79.7	10.4	9.9
17)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5.7	19.1	45.4	17.0	2.8	34.8	19.8	45.4
18) 진지한 반성	6.3	14.8	32.8	37.8	8.3	21.1	46.1	32.8
19)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8.1	13.0	46.6	27.1	5.2	21.1	32.3	46.6
20) 피고인이 고령	11.2	17.6	47.7	19.4	4.1	28.8	23.5	47.7
21)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10.1	15.5	43.5	24.4	6.5	25.6	30.9	43.5
22)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9.1	16.5	39.0	29.7	5.7	25.6	35.4	39.0
23) 보험 가입	8.1	15.0	52.3	20.9	3.7	23.1	24.6	52.3
24) 상당 금액 공탁	12.1	18.0	43.3	22.6	4.0	30.1	26.6	43.3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위반 처벌 현황

1

산업재해 사건의 처벌 현황

□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형량 부과

-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사건의 경우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선고
- '13~'17년간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하급심 처리 사건 3,405건 중 1,714건 판결문 기록조사 연구용역

- 자연인 피고인(2,932명)에 대한 선고형은 벌금형(57.26%, 1,679명), 집행유예(33.46%, 981명), 징역 및 금고(2.93%, 86명), 선고유예(1.71%, 50명) 順
- 징역형과 금고형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형기와 빈도 분석 시 징역 기간과 금고기간 모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구분	징역형	금고형
6개월 미만	8명 (12.5%)	1명 (4.5%)
6개월 이상 1년 미만	30명 (46.9%)	13명 (59.1%)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13명 (20.3%)	4명 (18.2%)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	7명 (10.9%)	4명 (18.2%)
2년 미만	6명 (9.4%)	-
합계	64명 (100%)	22명 (100%)

* 징역기간 중 최대 장기형은 28개월이며 평균 10.89개월 선고,
금고기간 중 최대 장기형은 18개월이고 평균 9.91개월 선고

- 벌금형의 평균 부과 금액은 자연인은 420.66만원이고 법인은 447.95만원이며, 벌금액수로 구분한 빈도 분석 시 모두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구분	자연인	법인
1백만원 미만	121명 (7.2%)	87개소 (7.3%)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780명 (46.5%)	556개소 (46.6%)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651명 (38.8%)	457개소 (38.3%)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23명 (7.3%)	87개소 (7.3%)
3천만원 이상	3명 (0.2%)	7개소 (0.5%)
합계	1,678명 (100%)	1,194개소 (100%)

□ 화재폭발 사고 시 형량 부과

○ 주요 대형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 부과

일자	사업장명	재해개요	재해자수	적용법조	형량
'08.1.7	코리아냉장	○ 냉동창고 설비공사 화재	(50명) 사망40명 부상10명	○ 종전 산안법 제23조 (안전조치, 화재위험작업 등)	1. 개인: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 2. 법인: 벌금2천만원
'12.8.13	GS건설(주)	○ 전기 스파크로 단열재화재	(13명) 사망4명 부상9명	○ 종전 산안법 제23조 (안전조치, 경보용 설비 등)	벌금 15백만원(과실치사)
'13.7.26	삼성엔지니어링(주)	○ 물탱크 누수여부 확인 중 폭발	(15명) 사망3명 부상12명	○ 종전 산안법 제23조 (안전조치, 구축물 폭발위험 예방 등)	1. 개인: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2. 법인: 벌금5천만원

○ 사망자 1명 이상 사고의 경우 대부분 벌금 부과

일자	사업장명	재해개요	재해자수	적용법조	형량
'12.1.10	명운건설(주)	○ 탱크 용접작업 중 화재	사망1명	○ 종전 산안법 제23조 (안전조치, 화재위험작업 등)	1. 개인: 벌금300만원 2. 법인: 벌금300만원
'14.10.18	금화종합건설(주)	○ 탱크 용접 정리작업 중 화재	사망1명	○ 종전 산안법 제24조 (보건조치, 밀폐공간 작업 등)	1. 개인: 벌금400만원 2. 법인: 벌금200만원
'16.3.28	슈프림종합건설(주)	○ 건축자재 창고 화재	사망1명	○ 종전 산안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벌금200만원
'19.2.8	유한콘크리트산업(주)	○ 가연물 화재	사망1명	○ 종전 산안법 제23조 (안전조치, 화기사용장소 화재 예방 조치 등)	벌금500만원

2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16. 시행)을 통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 시 처벌 강화

○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종전 동일)

- 개정법에서는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및 5년 이내 동일한 근로자 사망범죄 시 가중처벌(형의 1/2 한도) 등 재범 방지 규정 신설

○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수급인 근로자 등이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및 5년 이내 동일범죄 시 가중처벌 규정도 적용

○ (법인) 법인의 대표자 등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향 (<종전> 1억 원 이하 → <개정> 10억 원 이하)

□ 양형기준의 의의

- 사건에 따른 형량 차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법정형 중에서 법관이 선고형 및 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 시의 참조 기준*으로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설정

* 원칙적으로 구속력 없음, 다만 양형기준 이탈 시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통상 준수(12~16년, 양형기준 준수율: 89.7%)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 (현황) 법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 설정
 - 독립된 범죄군이 아닌 과실치사상범죄군의 일부 유형으로 분류, 가중·감경사유 없는 경우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범위 형량 권고

<과실치사상 범죄군 유형별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과실치사	-8월	6월 - 1년	8월 - 2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6월	4월 - 10월	8월 - 2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월 - 10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6월

○ (문제점)

- 안전보건조치미행죄 및 작업중지조치미행죄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한 다양한 중요 범죄유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 유형만 양형기준으로 설정

* 근로기준법의 경우 위반범죄를 독립된 범죄군으로 편성하여 강제근로, 중간착취, 임금 등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다양한 중요 범죄유형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형 대비 양형기준 낮음, 특히 동일한 범죄군의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법정형이 높음에도 양형기준 낮음

* (업무상과실치사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위반치사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처벌 관련 여론 동향

□ 현황

-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20.4.29.)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 인명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 형성
- 특히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조치 규제법인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양형기준의 합리적 조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등이 요구되는 상황

□ 중대재해 처벌 관련 여론 동향

○ 국회

-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 높여야('19년 국정감사)
 - * "전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바라는 욕구만큼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현실화될 필요 있음"('18.12월, 개정 산안법 상임위 의결, 한정애 의원)
 - "산재 예방을 위해 양형기준 강화를 통한 적정 형량 적용이 중요...개정 산안법 법정형 상향의 실효성 확보 위해 사법부의 엄격한 처벌규정 적용 필요"('19.10월 국정감사, 설훈 의원)
- 노동현장 대형 안전사고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5.4, 민주당)
- 민주당, 다음 국회 개원 즉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해야(5.4, 정의당)

○ 노동계 및 시민단체

- 이천 화재 재발대책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하라(5.6,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 이천 화재 참사는 사회적 타살, 재해기업 처벌 필요(5.1, 안전사회시민연대)
- 더 늦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5.4, 이천 지역 건설노동자 연대회의)

○ 언론보도

- 중대재해 기업주 처벌법 제정 중앙정부에 건의(5.6,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故 노회찬 의원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있었다면 이천 참사 막았다(언론보도 다수)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가.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나. 회신 완료 접수 의견(총 131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0.3.25.~3.26.(2)	○ N번방 관련자 엄중한 처벌 요구
2	2020.4.7.(1)	○ 가해자의 반성, 반성문 제출, 단체의 기부를 양형의 감경요소에서 배제해야
3	2020.4.3.(1)	○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시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
4	2020.3.24.~4.7.(21)	○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5	2020.4.3.(1)	○ 디지털 성범죄 입법 및 양형기준 강화
6	2020.3.31.(1)	○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시 성착취물의 정의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
7	2020.4.5.(1)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명칭을 디지털성범죄로 변경할 것을 요구
8	2020.4.5.~4.7.(40)	○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9	2020.4.6.~4.7.(7)	○ 성착취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촉구 및 양형기준 강화
10	2020.4.5.~4.6.(5)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명칭을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사진 또는 성착취물”로 명명할 것을 제안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1	2020.4.6.(1)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12	2020.3.26.(1)	○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강화 및 위원회 구성의 성비 불균형 및 향후 위원회 구성원의 변경계획 유무
13	2020.3.25.(1)	○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형을 올려줄 것과 성범죄 자의 양형기준 강화
14	2020.4.5.(1)	○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및 여성판사 우선 배치
15	2020.3.23.~4.6.(10)	○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16	2020.4.6.(1)	○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에 대 한 엄중한 처벌 요구
17	2020.4.5.~4.6.(31)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 양형기준 강화
18	2020.4.6.(3)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명칭 수정 및 양형기준 강화 요청
19	2020.4.3.(1)	○ 양형판단에 있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양형이 반영될 것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
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으로 귀하께서 요청하는 N번방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양형선고와 관련하여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양형기준안(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죄)에 관하여 관계기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연구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 의견조회를 할 예정이며, 추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공청회 일정은 법률신문, 일간신문,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및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할 예정입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으로 귀하께서 요청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가중처벌과 그 구체적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시 성착취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디지털성범죄로 변경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8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9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0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

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한다는 귀하의 의견은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우리나라 성범죄와 관련하여 그 형량이 너무 가벼우므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 3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양형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은 양형위원회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시각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성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우리나라 성범죄와 관련하여 그 형량이 너무 가벼우므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우리나라 성범죄와 관련하여 그 형량이 너무 가벼우므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으로, 여성판사의 우선적 배치를 요구하는 귀하의 의견은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우리나라 성범죄와 관련하여 그 형량이 너무 가벼우므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8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명칭 수정 및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9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우리나라 성범죄와 관련하여 그 형량이 너무 가벼우므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양형판단에 있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양형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다.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2020. 4. 19.까지 접수된 의견 중 미회신 의견, 총 189건)

- ▶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0.4.7.~4.19.(20)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2	2020.4.19.(1)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
3	2020.4.9.(1)	○ 엄중한 처벌로는 성폭력 없는 사회가 실현되지 않으므로 디지털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반대한다는 내용
4	2020.4.16~4.19.(6)	○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5	2020.4.19.(3)	○ 디지털성범죄자 엄중한 처벌 요구
6	2020.4.7.~4.19.(155)	○ 성착취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촉구 및 양형기준 강화
7	2020.4.19.(3)	○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3.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2020. 4. 27.까지 총 4건)으로 빠른 시일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0.4.2.(1)	○ 벌금제도 수형제 노역개선 필요
2	2020.4.20.(1)	○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3	2020.4.22.(1)	○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생각된다는 내용
4	2020.4.27.(1)	○ 엄벌주의로 얻는 범죄예방효과 보단 치안유지 인력의 충원이 범죄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내용

나. 민원 우편

- 접수의견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20.3.20	○ 민원인 본인이 형사피고인으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의견서
2	2020.4.27	○ 절도, 강도, 강간, 살인, 횡령, 자동차등 불법사용,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보내달라는 내용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에 문의사항이 없기에 별도회신은 하지 않음.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요청하신 그 외의 범죄 양형기준은 별첨 자료로 보내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양형기준」 및 「2019 양형기준 추록」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